

저출산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류양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팀장

2017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수 35만8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결혼하고 싶으나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주거지원(신혼부부 주거지원),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생활 균형 확산, 임신·출산부터 영유아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비용 경감,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등 돌봄 부담 경감, 모든 아동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지원 등이다. 향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040세대들의 삶의 경로에서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이 2022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들어가는 말

지난 2월 말, 2017년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발표되었다. 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수 35만8천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언론에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은 효과가 없으니,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엄청난 요구들이 쏟아졌다. 저출산 예산을 모든 출생아에게 전부 나눠주자는 의견부터, 일정 연령까지 전면 무상 의료와 교육

을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자, 비혼출산을 가로막는 차별적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백인백색의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사무처에서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제안 뿐 아니라 타운홀미팅, 그룹별 간담회 등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주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그리고 이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그간의 정책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한 국가주도적 관점에서 개인을 도구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다음은, 수요자 관점에서 생애 단계별로 그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가.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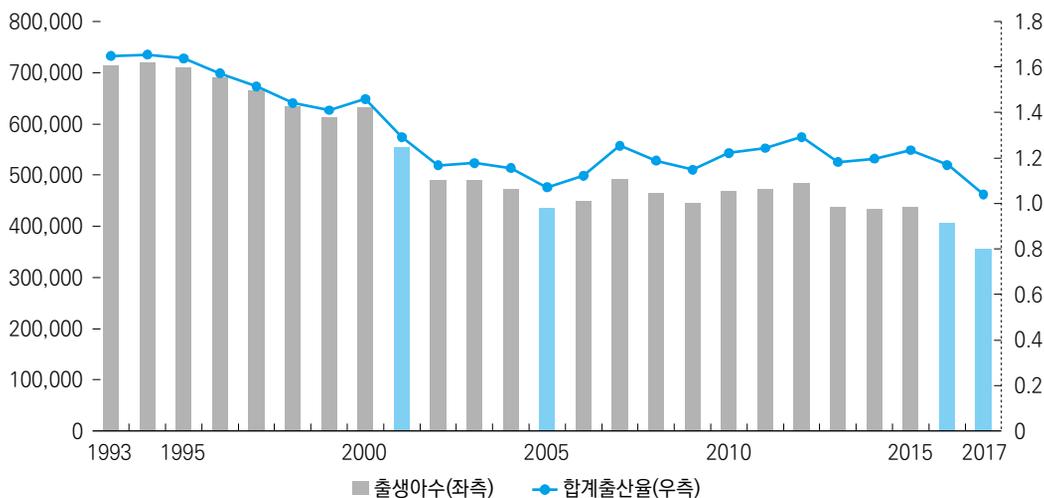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금 17년간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출생아수는 1970년대 연 90만 명대에서 일부 연도를 제외한 1984년~2000년대에는 60만 명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연 40만 명대로 가파르게 감소해왔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 1.05, 출생아수는 35만7천7백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상황도 어려워 보인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9천6백 명으로 전년대비 9천1백 명(9.2% 감소)이 감소하여,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수는 32.5만명~33만명선이 되고, 합계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전에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진입할 것이다.

〈표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3	...	2001	...	2005	...	2015	2016	2017
합계출산율	1.654		1.297		1.076		1.239	1.172	1.05
출생아 수	715,826		554,895		435,031		438,420	406,243	357,700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2] 인구 변화 전망

자료: 통계청 내부분석자료(2018)

작년 출생아수 약 36만명은 50년 전에 비해 약 3분의 1, 2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출생아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통계청 중위추계 전망보다 1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고 가장 비관적인 저위추계의 예상보다도 3년이나 빠르다.¹⁾

나. 저출산 현상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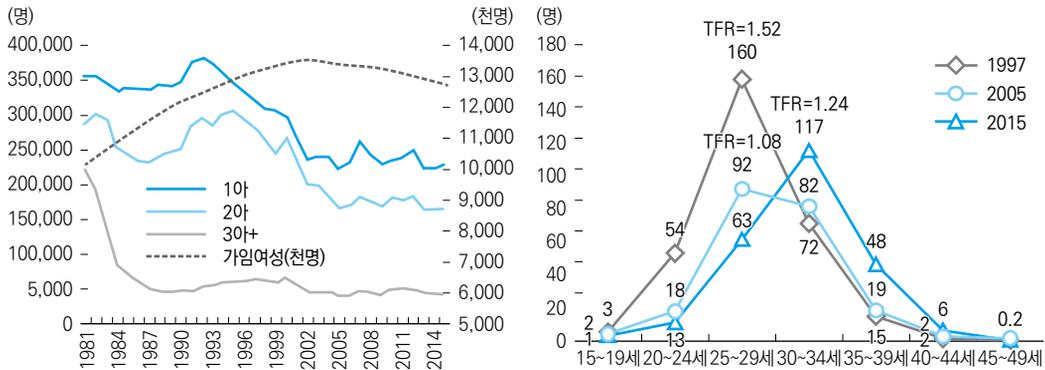
저출산 현상의 직접적 원인은 가임여성 인구 규모 축소로 인한 인구구조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여성들이 가임기에 접어들고, 베이비붐 자녀 세대인 이른바 에코붐(echo-boom)세대(대략 1979년~1992년 생)의 여성들이 주출산연령대(2017년 첫째아이 출산 평균 연령 31.6세 추정 대비)를

지나가게 되면서 가임여성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²⁾ 이렇게 출생아수 감소가 더 심해지면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음(-)의 인구관성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³⁾

비혼과 만혼, 만산, 단산 경향이 확대 된 것도 저출산 현상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상승했고 20대에서의 출산율 하락이 30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도 둘째아 이상의 출산 감소율이 커서 단산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⁴⁾(그림 3 참조)

이러한 인구구조적 요인 외에 저출산은 삶의 제반 여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IMF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20·40 젊은 세대들의 삶은 더욱 어렵다.

1) 이철희(20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목표 설정과 전략수립에 대한 제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2) 김종훈 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
 3) 우해봉·장인수(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종훈 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7, 24-25.



[그림 3]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 통계청(2017). 각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OECD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율, 세계행복 지수 57위, 성인 4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우리 사회의 건강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너무나 우울한 현실이다. 청년세대가 오늘을 살아내고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가늠케 한다. IMF 전만 해도 그들이 일하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대단한 모험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청년세대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혼·만혼을 택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요구가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가 아무리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 연금고갈, 복지부담, 국방자원 부족 등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개인은 그것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현재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20~40세대는 삶의 질이 매우 낮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인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연기하거나 거부하여 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다. 특히,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한 젊은 여성들에겐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문화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 정책 아젠다로 들어오게 된 것은 2005년 이후다. 2005년 출산율이 ‘1.08 쇼크(출생아수 4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와 국회가 협업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

〈표 2〉 저출산 대책 수립 과정

시기	내용
2005.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9. 1. 시행)
2005.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2006.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수립
2008.11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본계획 보완판 수립
2010.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 수립
2015.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을 시계에 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대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기본계획에서 이미 중장기적인 관점과 종합적인 정책을 추구하였고 국민의 참여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친화와 양성평등 등에 대한 핵심 개념은 이미 포괄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을 거쳐 국가차원에서 12년 넘게 집행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은 그 성과가 부진하고 기대한 정책 목표 또는 투입된 재정 규모와 정책 자원에 비해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1·2차 계획은 주로 보육 등 돌봄에 중점을 두고, 주거와 고용, 일·생활 균형의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효과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관점과 이해 간에 괴리가 커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인식과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도 받는다. 무엇보다 개별 수단들의 백화점식, 병렬식 나열과 필요에 따른 개별적 개보수에만 집중하고 정책의 목표와 연계, 정책 수요와 공급 간 관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⁵⁾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관련 예산은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정 작업 없이 개별 부처에서 제시한 사업목록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위원회 역할 집행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평한다. 이에 따라서 관련 정책이 추구하는 단기적·장기적 정책 효과에 따라 관련 예산

〈표 3〉 분야별 재정투자 현황('06~'17)

		단위: 조원(%)			
분야	계	1차 계획('06~'10)	2차 계획('11~'15)	3차 계획('16~'17)	
계	126.4 (100.0)	19.8 (100.0)	61.1 (100.0)	45.5 (100.0)	
가족 지출	출산·양육·돌봄	23.4 (18.5)	3.9 (19.7)	8.1 (13.2)	11.4 (25.1)
	보육	84.4 (66.8)	14.9 (75.2)	46.3 (75.8)	23.2 (51.0)
	일·생활 균형	6.6 (5.2)	1.0 (5.1)	3.6 (5.9)	2 (4.4)
	고용·주거	12 (9.5)	-	3.1 (5.1)	8.9 (19.6)

5) 김중훈 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5.

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⁶⁾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투자 현황은 OECD의 평균 GDP 대비 2.2%와 비교했을 때 1.1%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 재정에는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청소년 소프트웨어교육 등 저출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과제도 다수 포함되어 상당히 부풀려진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약 10여년을 지나오면서 '저출산 추세의 심화를 극복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감소와 성장잠재력 감퇴, 재정을 포함한 국가 지속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미달했고, 재정과 정책자원 투입 대비 효과성도 미흡하다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단의 상당수가 정책수요자인 개인과 가족단위의 국민이 인지하고 체감하고 동의하는 데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⁷⁾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지난 해 새롭게 출범한 본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출산율을 목표로 한 국가주도의 출산 장려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결혼하고 출산,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지금 이 시점에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정책적 선도를 통해' 극복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대신에 '증장기 시계를 가지고 적응 또는 완충해야 할 현상'으로 이해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갖고, 본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40세대를 주인공으로 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 저출산대책의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

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 환경이 20여년 동안 많이 변화였다. 출산 주체인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의 가치관은 급변했다. 지금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 정책의 기대효과성에 대해서 국가와 개인의 관점과 이해가 갈리고 그 괴리가 확대⁹⁾되는 시대로 진입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3차 계획은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구확보라는 목적으로 출생아수와 출산율 중심의 정책을 수행해 왔다. 개발독재시대와 목표만 다를 뿐(출산규제 vs 출산장려), 정책의 추진방식은 대동소이하였다.

6) 정재훈·김수완·김영미(20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7) 김종훈 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2.

8) 우해봉·장인수(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증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김종훈 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8.

그러나 앞으로는 포용적 복지를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복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 비전과 목표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 정책'으로 그간 정부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전에는 저출산 대응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현상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인구변동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적응하고 완충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숫자로만 말하던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치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파편화되어 있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정부주도의 정책보다는 정부,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 협력하여 함께 정책을 구성해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나. 핵심 추진과제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이후 구체적 재정책의과정을 통해 예산이 수반된 대책이 조만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2040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삶의 경로를 선택할 때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켜 자신들의 생애 계획에 결혼, 출산, 양육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결혼과 출산, 양육의 경로를 선택 할 때, 희생이 강요되거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양성 평등한 노동 및 양육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의 평등한 출발을 위해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확대하고,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일정비율을 우선하여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금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혼부부 전용대출도 개선할 것이다.

둘째,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부터 생후 1년간 의료비 제로화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이미 확정된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의 확대와 공보육 40% 실현 정책과 더불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정책으로 실현해 갈 것이다.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출산지원금을 받는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간 의료비 제로화를 목표로, 현행의 임신·출산 시 의료비체계를 대폭 개편하고자 한다. 산모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하고, 치료에 필요한 상급병실 및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한 우선 급여화를 추진한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을 확대한다.

셋째, 일과 아이,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제도의 경우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불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임금 삭감없이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장 2년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리고 양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되도록 급여지원을 확대하고, 최소한 1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에 유급으로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로 확대하고, 이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동일자녀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벨 중소기업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제도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상향한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워라벨 우수기업 2만개를 육성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해 갈 것이다.

넷째,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동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양육여건 등으로 직접양육을 선택하기보다는 유기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경우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임신초기 상담부터 출산·양육 과정 전반의 현금·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우선적으로 한부모가 자립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프레임의 편견을 해소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혼인여부와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고, 미혼모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극복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윈스톱 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삶에서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과 주거, 교육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해서, 통합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2022년이면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국가주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고자 했다면, 새로이 발표되는 저출산 정책은 사람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정책적 시계를 갖고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처럼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이 17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거나 반전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이다. 국가, 국민, 기업, 지역 등이 함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살고 싶은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저출산 핵심과제'는 종합적 계획은 아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영역에 대한 우선 처방이다. 그리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고령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의 총체적 측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올해 말 발표 계획인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담겨질 예정이다.